

장문석(국문학) 교수 | 10면 이슈
민유기(사학) 교수

지난 13일 공개된 우리학교 교수·연구자의 시국선언문이 화제다. 이에 참여한 교수를 만나 시국선언문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문석 교수

민유기 교수

마을버스 노선 변경안, 인·차도 구분 없어 위험 | 6면 기획

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01 마을버스의 노선 변경안이 먹자골목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제 1733 호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대학주보



서울캠 노천극장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에 서명하는 학생

‘경혁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약 400명의 학생이 서명했다.

하서연 기자 hse0622@khu.ac.kr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2년만에 탈출 외대 이의제기, 전원찬성 실패로 부결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양 캠퍼스 2025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국제캠 총학은 ‘코어’ 선본이 47.22%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됐다. 입후보자가 없어 총학 선거가 무산된 서울캠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중심으로 내년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과대는 3년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벗어나게 됐고 외국어대(외대)는 후보자 간 이의제기로 선거 종료 후 6일 만에 당선 확정 공고가 떴다.

서울캠 비대위 구성 회칙
절차 맞지 않아 ‘개정’ 추진

서울캠은 입후보자가 없어 총학 선거가 무산된 이후 비대위 구성 관련 회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임 총학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 회칙상의 모순이 이유다.

서울캠 학생회칙 제37조 2항에는 “선거 무산 즉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고 나와 있고 제37조 3항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혹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비대위 구성과 그 사유를 담은 경위서를 공포하고, 선거 무산 후 24시간 이내 중운위를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아직 비대위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총학에 따르면 현행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총학 임기는 12월 31일까지이고 선거는 통상 11월 말에 진행되는데, 회칙에 따르면 선거 즉시 비대위가 꾸려져야 하는데, 이는 기존 총학의

임기와 겹치게 된다.

이에 총학은 회칙상 모순을 개선하는 방향의 개정안 의결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돼도, 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총학생회장단 임기가 종료된 후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선거 무산 시 24시간 이내 중운위를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게끔 수정된다. 개정안은 지난 3일 조규영(미디어학 2021) 총학생회장에게 의해 발의돼, 오는 1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과대학, 3년만 비대위 탈출
“단과대 활동 복원할 것”

한편 문과대는 2년간의 비대위 체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학생회가

구성됐다. [RE:VIBE] 선본의 정 후보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씨와 부후보 김세린(국어국문학 2022) 씨가 78.62%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과대 학생회 양우혁 당선인은 “후배들이 학생회 주도 사업하에 행복하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출마했다”며 “당선돼서 매우 기쁘고 2025년의 문과대를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20대 학교생활에 서로를 향한 혐오 없이 그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롭게 당선된 문과대 학생회는 그동안 소실된 단과대 단위 활동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비대위 기간, 단과대 단위 활동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

호관대 대리투표 의혹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서울】호텔관광대학(호관대)에서 ‘대리 투표 의혹’이 발생했지만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호관대 재학생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학생회 선거 모바일 투표를 시도했다. 그런데 본인 인증 과정에서 ‘이미 투표했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A 씨는 부정 선거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서 본인과 본인 앞, 뒤 학번을 투표 사이트에 입력해 전자투표 증명서를 내려받았다. 그 결과 학번 순서대로 한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연이어 투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인지한 선관위 측은 즉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사건 인지 후 학교와 투표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로부터 ‘투표 여부 외에는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신문이 A 씨로부터 받은 3개의 전자투표 증명서(앞 학번, 본인, 뒷 학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증수단은 모두 ‘현장 발급’이었다. 세 증명서는 모두 기표소에 설치된 기기로 투표한 증명서였다. 정보처 확인 결과, 접속 IP 주소 역시 호관대 건물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기기 역시 기표소에서 사용하는 ‘LG G패드 3’다.

선관위 측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했지만, 진상 파악은 불가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를 비추는 CCTV 한 대를 제외하고, 호관대 1층 로비를 비추는 CCTV는 2대인데, 둘 다 로비 중앙의 기표소를 비추지 않고 있다. 한 대는 기표소 기준 좌측 기동 방향, 나머지 한 대는 기표소 기준 우측의 로비 테이블을 비추고 있다.

선관위 측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거가 밝혀지면 학교 측과 주변 법조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것”이라 밝혔다.